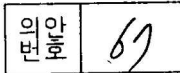


大田廣域市農地改良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(案)



제출년월일 : 1995. . 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

- 이 조례는 '94. 12. 22. 폐지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에 의거 농지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9. 1. 1 제정하였으나,
- 우리시의 경우 1989년 직할시 승격이후 도시발전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집단화 농지가 감소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추진등으로 농지개량사업 시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농지개량사업 시설 대상 예정지를 조사한 결과('91.10.3) 사업대상지가 없고,
- 구법에 의거 제정된 동 조례는 '94. 12. 22 새로 제정된 농어촌 정비법 부칙 제6조(농어촌근대화 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의 규정으로 대체 존치할 수 있으나 동법제 9조(농지기반정비사업시행자)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기초자치단체(구)의 업무로써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關聯法規

-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 7조
- 농어촌 정비법 제 9조, 동법 부칙 제6조.
- 대전광역시 농지개량사업시행 조례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
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규

□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7조 (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)

농지개량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 진흥공사 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 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.

- ('94. 12. 22. 삭제) -

□ 농어촌 정비법 제9조 (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)

농업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·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. 다만 제2조제3호 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.

□ 농어촌 정비법 부칙제6조 (근대화촉진법 개정에따른경과조치)

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며,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 또는 그 일부조항을 인용한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제10편 지역경제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

●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[1989. 1.1
조례 제1788호 전문개정]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 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업의 범위)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구획정리사업(경지정리)
2. 환지 처분업무
3. 농지의 교환 분합
4.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

제 3 조 (위원회 설치) 농지 개량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고 몽리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사업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4 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의 법 제5조의 자격자 및 농지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전항의 법 제5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(이하 “지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, 지구위원은 몽리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(자연 부락 단위로 호선도 가함)를 시장이 위촉한다.

제 5 조 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 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
2. 일시 이용지 및 예정지에 관한 사항
3.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
4. 몽리자 부담금(노력, 현물등 포함)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
제10편 지역경제 대전광역시농지개발사업시행조례

5.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몽리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.

③ 위원회는 전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7 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지구 사업이 완료(환지청산금정산 포함)될 때까지로 한다.

제 8 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일 3일전에 실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9 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제10조(회의록)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등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과 여비)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사업비의 부과 등) ① 이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 108조의 규정에 사업시행 구역내의 법 제5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기채원금 및 이자사무비 기타 이 사업수행에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경비총액에서 보조금(현물 포함) 및 시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제10편 지역경제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

③ 경비부과 기준은 토지(법 제126조 제2항에 의한 환지 교부대상지)지적에 비례하여 부과되 환지계획인가가 있는 후에는 환지 교부지적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한다.

④ 부담금은 시장이 지시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⑤ 부담금의 체납처분 가산금의 징수 및 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예에 의한다.

제13조 (토지의 가격평정)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환할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.

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③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.

제14조 (일시 이용지의 지정) ① 농지 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 계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농지개량 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, 지상권,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,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전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)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.

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물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

제10편 지역경제 대전광역시농지개발사업시행조례

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16조 (환지교부)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.

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계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.

제17조(환지청산)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 계획에 의해 행한다.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을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.

제18조(환지청산의 취급)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.

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9조(청산금의 공탁) 청산금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(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) 법 제5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 농지개발 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(가옥 기타 공작물을 포함)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법 제5조의 각호에 계기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
2.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
3.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·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
4.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
5. 토지 소유자(공작물 소유자 포함)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
6. 가옥 및 공작물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

제21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편 지역경제 대전광역시농지개발사업시행조례

부 칙 (조례 제1788호)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당시 시행중인 농지개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대전광역시농지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5 . 12.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5. 12. 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5. 11. 23. 대전광역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4. 11. 27.

다. 상 정 일 자 : 제48회 대전광역시 의회 정기회
제 6 차 산업건설위원회(1995. 12. 18) 상정,
질의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국장 박 성 호)

가. 제안이유

- 이조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7조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9.1.1 제정하였으나 '95년 12월 22일자로 관련법이 폐지되었으며,
- 우리시의 경우 1989년 직할시 승격이후 도시발전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집단화농지가 감소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추진등으로 농지개량사업·시행이 중단된 상태이며, 농지개량사업 시설 대상 예정지를 조사한 결과('91. 10. 3) 사업대상지가 없고

- 구법에 의거 제정된 동조례는 '94.12.22. 새로 제정된 농어촌 정비법 부칙 제6조(농어촌 근대화 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의 규정으로 대체 존치할 수 있으나 동법 제9조 (농지기반 정비사업 시행자)의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기초자치단체(구)의 업무로서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관련법규

-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7조
- 농어촌 정비법 제9조, 동법 부칙 제6조
- 대전광역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장 홍 진)

가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: 앞의 내용과 같음.

나. 검토의견

- 금번에 폐지코자 하는 대전광역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지정리 및 환

지처분, 농지의 교환 분합, 기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범위로 규정하고 직할시 승격일인 '89년 1월 1일 제정

하였으나 그 동안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집단화 농지가 감소되어 현재는 농지개량사업 시설대상 예정지가 전혀없는 상태에 있으며,

- 또한 농촌근대화 촉진법 폐지와 함께 새로 제정된 농어촌 정비법 부칙 제6조의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

조치에 의거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나 구청에서 그 동안 운영해 오던 물리자 심의위원회도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 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<p>(이병찬 의원)</p> <p>·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 개정과 관련 물리 자 심의위원회의 실적 전무에 따라 조례 를 폐지하는 것인데 대전시 변두리에도 농지가 많은데 법의 중복에 의한 것인지 한가지를 없애면 한가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?</p> <p>(송완섭 의원)</p> <p>· 기금은 없나요?</p>	<p>(박성호 지역경제국장)</p> <p>▶ 현재 농지개량 희망대상자가 없다는 것 과 있어도 구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조례는 폐지해도 운영에는 지 장이 없음.</p> <p>▶ 없음.</p>

5. 검 토 요 지

없 음

6. 소위원회 심사내용

없 음

7. 소수의견의 요지

없 음

8. 심 사 결 과
원 안 가 결

9. 기타 필요한 사항
없 음